

“과학기술 강국, 이루어내야 한다”



■ 일시 : 2002년 10월 18일 (금)

14:00~16: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 개회인사 : 김시중(과총 회장)

■ 좌장 : 박승덕(과총 부회장)

■ 질의 : 민석기(고려대 자연대 교수)

정안호(한국교원대 총장)

지제근(서울대 의대 교수)

김기협(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

김도연(서울대 공대 교수)

박호군(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나도선(울산대 의대 교수)

김학수(서강대 교수)

■ 응답 : 이희창(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배석 : 이상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외

주요 당직자

■ 기조연설

□ 이희창(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존경하는 김시중 회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에 관해서 특히, 대통령후보들을 불러서 말을 시키면 아마 모두 너무나 좋은 얘기들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들만 해 가지고는 차별화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97년에 제가 대통령후보로 대전에도 가고 몇 군데 가면서 과학기술인 상대로 역시 약속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저의 생각, 믿음, 그리고 앞으로 어

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97년도에 IMF를 겪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기에서 슬기롭게 벗어나 경제를 다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IMF 때에 피해자가 누구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일부 맞습니다. 또 쓰러진 많은 기업, 퇴출당한 기업은 바로 피해자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해자 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과학기술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소, 정부 출연연구소든 민간연구소든 R&D 부분에 종사했던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손쉽게 사람을 잘라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산성인데, 생산성의 가장 핵심인 과학기술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현상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작지만 매우 경쟁력에서 강한 나라들 중 대표로 핀란드를 꼽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핀란드로서는 아주 어려운 불황기였다고 합니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오히려 다른 부분의 예산을 깎으면서 R&D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오늘날의 경쟁력을 만들어 낸 바탕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

“IT·NT·BT 등 5T 분야 日·EU 수준 도약 연구원 정년 보장, 일자리 2백50만개 창출 과학기술·교육투자로 연 6% 성장 지속”

다. 저는 직접 편란드에 가서 노키아 라든가 또 테케스 같은 과학기술 조정 기구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치계는 물론이고 국민 대부분이 하나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편란드에 갈 때 러시아를 거쳐서 갔습니다. 두 나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의 하나이고 편란드는 거기에 붙은, 말하자면 바위에 붙은 돌덩이 같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쟁력의 서브스펜스에 있어서는 편란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으며, 어려울 때 일수록 뭉쳐서 국민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고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미래를 개척하자 하여 이룩해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IMF 위기때 과학기술을 대접한 태도와 비추어보면 너무나 대조적이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장을 말할 때 대체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키워 온 큰 부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생산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고 또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근대화를 이루면서 고도성장, 또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에 소위 압축성장을 이루어놨다고 우리가 얘기

합니다. 이 고도성장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노동과 자본의 집중적인 투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성장을 늘리려는 것이 지난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성인데 생산성은 과학기술의 혁신 특히, 기초과학기술의 혁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가 발달해온 과정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한 시대를 바꿔놓곤 했습니다. 농경시대로부터 소위 산업화시대로 뛰어오를 때도 과학기술이 그 바탕이 됐고 산업화시대에서 정보와 지식기반사회로 도약한 것도 IT와 같은 과학기술이 바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데도 실제로 국가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또 미래를 여는 성장엔진을 찾는다고 할 때 흔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에서 한 걸음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로 과거에 연 7%까지도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 5% 성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항상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단계 뛰어올라서 2만5천달러 정도가 되면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소위 G10 국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연평균 6%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년 후, 2만5천달러 시대가 되면 대체로 2백50만개의 일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일자리면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서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복지문제까지도 해결됩니다.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 이 세가지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 6%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그 성장의 엔진을 삼을 것인가. 무엇으로 그러한 경쟁력을 기를 것인가.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두가지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교육의 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둘로 나누어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육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97년도에도 연 6%로 교육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도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투자는 GDP 4.7%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장엔진으로만 들어서 G10 국가까지 진입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그야말로 쏟아붓는 식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육의 경우 GDP 대비 약 7% 정

도는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 10% 삭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10%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부예산을 잘 조정하면 그 정도의 재정적 예산은 나올 수 있으며 10%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R&D 부분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건실하게 GDP 대비 약 3% 정도 이상은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아마 GDP 대비 2.6%~2.7%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가령 약 10%, 11%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최소한 3%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D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과학 부분이 대체로 제가 알기로 그 투자액 내에서 19%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 25%까지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노이대학에 석좌교수로 계시는 조교수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은 인력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일리노이대학에도 중국인 교수가 상당히 많이 와 있고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의 청화대학이다. 또 북경대학이다 하는 유수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런데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조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섬뜩해질 정

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대개 전부 기초에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때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참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기초과학 쪽에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또 주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공계 지원이 줄고 또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지원생이 줄고 또 취업도 잘 안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인책보다 과학기술과 기능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과학기술인에 대해서, 기능인에 대해서 정말 국가나, 정부나, 또 사회가 존경을 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전문가 선생님으로 존대하고 우대하는 그러한 풍토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과거 어느 한 때 우리는 과학기술 하면 보통과 다른 매우 우수한, 머리가 좋은 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한 자락 높이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사실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한다하면 우선 과학기술이나 기능부분부터 잘라 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연수원의 교수를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처음

1970년에 설립을 했을 때 설립 초기에 세사람의 교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수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데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 중에 공대출신들이 있습니다. 공과대학이라는 아주 다른 분야에서, 법과는 다른 분야에서 공부하고도 아주 우수하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과 쪽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보고 참 아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도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은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중요성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이 확고히 잡히고 서야만 그 위에서 모든 국가기능, 사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이라는 면에서 보면 저는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몰리는 것 보다는 과학기술 쪽에 몰렸으면 합니다. 또 실제로 과학기술에 가서 소요되는 우수성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것은 문과나 또는 법과 쪽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조 출신이고, 법관 출신이지만 우수한 학생은 법보다는 과학기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것은 법과 쪽으로 오면 출세가 빠르고 그만큼 먼저 안정이 되고 또 오래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못지 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과학기술 쪽에 있다면 결코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계 쪽에 사회와 정부와 또 국가의 관

심과 존중이 더 쓸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 또 병역특례 제도를 확충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예컨대, 정부가 무슨 행사를 하든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과학기술계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것으로 만드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일부터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집안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고 이태규박사입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처음에 다니러 나왔을 때가 1960년대인데 그 당시 그 분을 대하는 국내의 태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국 과학자로서 외국에 가서 업적을 쌓고 있으며 존경받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시민환영회가 열리고, 또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예산에 한번 방문을 하실 때 따라갔더니 역에서부터 온 군민이 도열해 있으며 취주악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과학자에 대해서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숭양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기대 중에 아마도 과학기술계에 계

신 분들이 뭔가 체질에 맞지 않는 또 엉뚱한 기대다 하고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성과에 대한 기대, 일종의 Out-Put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을 잠시 했습니다. 감사원장에 임명이 된 뒤에 많은 과학단체장, 과학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나 과학계에 대한 감사를 안 해줄 수 없느냐, 정부 연구기관이라면 정부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또 아니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1년 단위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 집행한 결과, 예산을 따올 때 내걸은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성과가 뭐냐, 이렇게 따지면 정말 과학기술계에서는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몇 년 걸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연구에 투입해서 실패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자꾸 따지고 하면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 없다. 그러니 감사원의 감사가 가장 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과학기술계에 대한 감사의 새로운 방향과 기법을 새로 검토해서 안을 내라고 지시하고, 제가 책임하는 동안에는 감사를 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과를 내놔라 하면 아마 과학기술계로서는 좀 황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그만큼 썼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지금 막 질주하는 사회에 성장의 엔진이라 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와야 국민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또 과학계로서도 지금 이만큼 돈 받으면 이만큼 한다고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과학기술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물론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야하지만 돈을 들인만큼 안심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 투자의 진면목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 과총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의 인식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입으로는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만큼 과학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만 약속이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과학기술계 출신이 아니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법은 잘 알지만 과학기술 쪽은 잘 모를 것이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치는 저를 도와주는 우리 정책위라면 또는 특보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부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에너지와 정신을 쏟을 수 있는 또 쏟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저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지가 실제로 실현되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기왕이면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과제와 발전 전략은 나눠드린 텍스트에 썼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승덕 부회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원점이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여러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과학기술이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1백만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민석기 (고려대 자연대 교수)

우선 과학기술 정책분야와 재원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창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보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과학기술이 경제의 예속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특보보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저는 과학기술 특보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절에는 수석비서관보다 특보가 더 힘을 썼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통령이 활용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희망하시면, 또 그것 때문에 표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민석기 (고려대 자연대 교수)

각 부처에서 집행하고 있는 R&D 부문을 조정, 조율해서 경제개발에 과학기술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대통령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면 사실 부총리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경제 부총리와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민석기 (고려대 자연대 교수)

입법부에 과학기술인이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더 힘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후보께서는 입법부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 하실 기회가 있을 때 과학기술인을 적어도, 거의 3분의 1은 안되겠지만 상당수의 과학기술인을 입법부에 비례대표 후보로 몇명 정도를 추천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십시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저도 적어도 3분의 1은 안되겠지만 상당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 민석기 (고려대 자연대 교수)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65%~ 2.67%인 GDP 대비 R&D 연구비를 3%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 1백22 억 달러 되는 것이 3% 되어봐야 1백 38억 달러가 되어서 약 15억달러 밖에 증액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OECD에 들어가 있는데 OECD 국가의 R&D 일인당 대비 평균은 5백



질의에 나선 지제근 서울대 교수, 정완호 한국교원대 총장, 민석기 고려대 교수, 박승덕(좌장)과 총부회장(왼쪽부터)

35달러입니다. 더욱이 G7 국가는 1인당 R&D 연구개발비가 7백30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내에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서 G7 국가가 되기에는 3%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일각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3% 가지고는 안되고 5%~6%가 되어야 우리가 10년 내에 G7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이상이면 저희 과학기술계에서는 약 5%나 6%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계 쪽에 와서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을 드리면 당장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우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R&D 투자부분을 3% 이상부터 출발하겠다는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민석기 (고려대 자연대 교수)

이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저희 R&D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교육비나 국방비와 똑같이 경직성 예산으로 하여 예산처의 경제판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R&D 투자의 넓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아마도 교육부분은 상당 부분, 좀전에 말씀드린 교육투자부분 GDP 대비 7% 가운데 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완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이회창 후보(왼쪽)와 배석한 주요 당직자

“과학기술 特補 설치, 정책 우위에 둘것”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

현상에 대한 이후보님의 입장, 그리고 이를 치유할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모두에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을 재미있게 만들고 창의력과 실습위주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공계 기파현상이 심각하게 돼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구상이 되셨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만 학생들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우대와 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매우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희망이 몰리도록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공계 안에서 대학을 자기가 희망하는 이공계에 들어가기가 쉽고, 또 들어가서 학교 공부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할 때 그 선발기준 등에 있어서 적어도 이공계의 자질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신축적인 기준 같은 것이 제시됐으면 좋겠으며 그 다음에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고 또 병역특례제도 같은 것도 이공계출신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취업입니다. 졸업한 후에 취업이 제대로 돼야만 이공계로 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R&D 투자의 확충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장잠재력을 길러서 연 6%의 경쟁력을 기른다면 5년 안에 약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기능, 과학기술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완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모두에 정부조직을 과학기술 일류국가에 걸맞게 개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행정기구에 과학기술 교육을 담당할 전담 부서의 설치 용의가 있으신지, 일반적으로 과학도 초·중·고등학교 16개 교과면 교과의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경제대국의 뒷받침, 아주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의 하나가 아니고 국가 대계를 잇는 그런 교과로서의 과학기술국이나 아니면 과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답해주십시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충분히 검토할,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완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이공계 출신의 사회적인 대우, 특히 과학기술계 연구소 연구원의 연봉, 승진, 연금, 신분보장 등 희망적인 유인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단적으로, 가령 지금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우선 기업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의 문제, 그리고 정부산하 연구원의 경우에는 정년문제 같은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기업연구소 연구원의 경우에 정부산하 연구소와 대학교간의 정말 좋은 인재간에 서로 교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일본에서는 기업연구소 출신이 노벨상을 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 연구원의 경우에 정년이 일반 교수나 교직원과 달리 아주 형평에 맞지 않게 짧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균형에 맞게 늘릴 필요가 있다. 승진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지제근 (서울대 의대 교수)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할 때흔히 그 나라 학자들이 얼마나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표하는가가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논문을 외국의 유수한 학술잡지에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그동안 국가의 기초과학에 관한 정책적 접근이 부적절했던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연구는 당장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과학상이 물리, 화학, 생리의학 같은 기초과목에 국한돼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또 월드컵 4강 신화도 히딩크의 기초훈련이 그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발언에서 이후보께서 일리노이대학 교수의 예를 드시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으로 고무되었고, 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19%에서 25%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한 내용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의 육성방침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대답의 일부가 이미 기초연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후보께서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을 언제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겠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제가 대통령이 돼서 약속한대로 집중적으로 하면 제 임기 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합니다. 경제에서 생산성의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때 소위 기초기술, 또는 원초기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초과학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 김기협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

우선 이후보님의 과학기술비전 제1항에 보면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일류인 나라, 그리고 현장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 연구소가 이미 1만개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은 17만명, 그 안에 박사인력이 6천5백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4만6천5백명의 약 1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연구소에 박사학위급

연구인력 한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1만 명의 고급 연구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공계통의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산업경쟁력도 올라가게 되고 국가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1천명의 이공계 학생들의 해외유학 지원보다는 1만 명의 산업역군을 창출해내는 것이 효과적이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소요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1석3조 이상의 실효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그렇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이른바 연구원 연수제도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는 더 확충할 것을 이미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연구분야별로, 연구소 별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래 되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체로 지금보다 약 5~6배의 더 투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 김기협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출범시켜서 성공시켰던 달나라 정복계획과 같은 범국가적인 장기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이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질의에 나선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도연 서울대 교수, 김기협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왼쪽부터)

있습니다. 우리 과학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겠습니다.

□ 김도연 (서울대 공대 교수)

이후보께서 진실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참 풍요로워졌다 라고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받을 때나 쓸 때마다 그런 걸 좀 느끼곤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제일 필요한 게 휴대폰이고 또 제일 겁나는 게 휴대폰입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약속을 제 시간에 못 지키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통신이 안 되어서 중간에 차에서 내려 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쉽게 연락을 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게 도청·감청이 된다 해서 전화를 서너개씩 가지고 다니다가 며칠 전 비화기가 설치된 최신 전화기를 입수했습니다. 이제 아무 데서도 도청이 안 되는 전화기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 김도연 (서울대 공대 교수)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기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은데 이런 기술사회를 리드하는 우리 정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 2001년의 행정고시로는 2백33명, 기술고시로는 41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해서 그 비는 5대 1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일본의 경우 공무원 1종 시험의 합격자는 사무계열이 2백41명, 기술계가 2백63명으로 기술계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공계 인력의 공직 진출문제를 떠나서도 사법고시를 위시한 현행 고시제도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반복학습과 단순암기에 몰아넣으면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주변에는 부끄럽게도 고시촌이 있고, 스탠포드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1세기 우리 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실한 이후보님의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의 고시제도를 철폐하거나 혹은 대폭 개선



질의에 나선 나도선 울산대 교수와 김학수 서강대 교수 (왼쪽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각 부처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각 부처가 알아서 수시로 선발하는 그러한 인재등용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시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확실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우선 확실한 대답은 현행 고시제도 하에서도 기술고시와 일반행정고시, 소위 비기술과의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안됩니다.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기술고시나 또는 기술계의 입문이 훨씬 늘어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체제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한 그림을, 단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시제도가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들어가서 출세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평소의 제 지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고치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 보면 강택민, 호금도 모두 엔지니어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하고 과

학기술인이 모든 분야에 특히, 정치분야에도 많이 나와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나라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개발의 주체가 산학연인 데 이 산학연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

고 있고 또 그 어느 하나의 주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또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이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선진국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연구가 크게 발달돼 있는 미국에서도 NIH나 NASA, 그리고 아르곤네셔널랩 또 샌디아연구소 이러한 정부의 연구소가 있고 또 그 기관들의 역할은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차지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화학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국립연구기관이 있고 또 독일의 막스플랑크나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 등도 또한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우리 나라의 낙후된 산업을 일으키고 또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그 동안 큰 공헌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산업체가 해야되는 역할과 그리고 대학의 기초기술 연구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거대과학과 첨단 기술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고 또 이를 담당해야될 연구주체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래서 이후보님께서도 미국의 케네디대 통령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프랑스 드골대통령의 강력한 과학기술정책 드라이브 같은 큰 구상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연구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연구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정책이나 연구의 안정적인 환경,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후보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그것은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사회의 관심이 과학기술보다 다른 쪽, 돈 빨리 벌고 출세하는 쪽에 가 있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 안에서도 기초 내지 연구 쪽보다는 뭔가 바로 산업화할 수 있는 쪽에 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항상 남의 뒷자리를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R&D 부분에서 보다 기초 쪽에 관심과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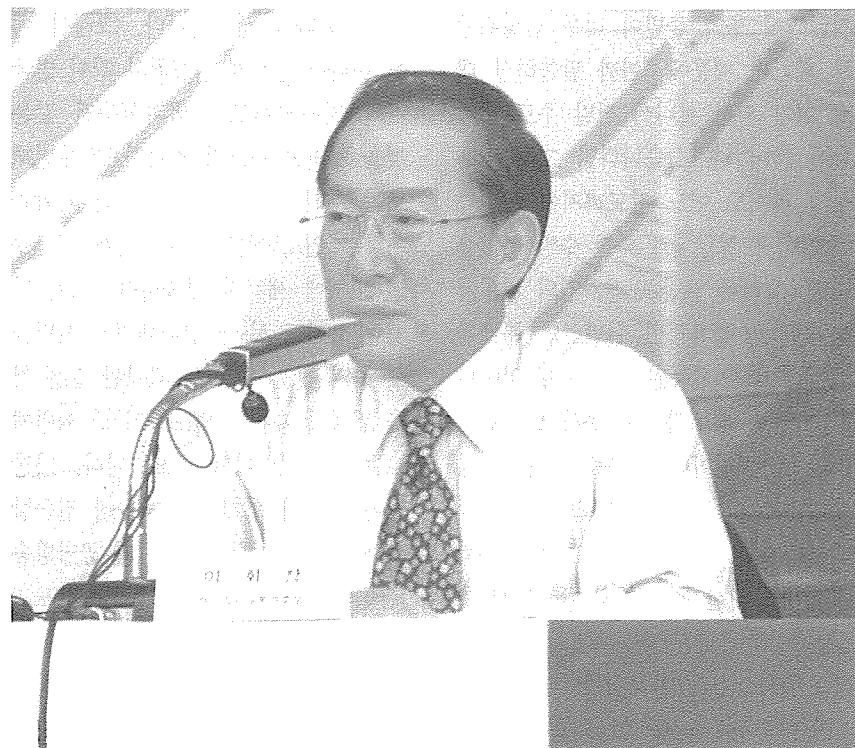
□ 나도선 (울산대 의대 교수)

여성 과학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IT, BT, NT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여성 과학기술자의 육성은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직관력, 감수성, 유연성 등에서 우수하며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공계 기피풍조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인데, 다행인 것은 이공계로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한국 여성의 능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녀 불평등 때문에 여성 과학자들은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면 우리나라의 첫 노벨 과학상을 여성 과학자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대하여 이후보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모든 고용기관 즉,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여성 과학자 채용 및 승진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특히, 평등화를 이루는 목표시점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끝내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여성이 아주 드뭅니다. 이공계 여학생의 비율이 현재 얼마인가 하면 42%입니다. 오늘 배포하신 자료에 여성 과학자에 대한 대책이 전체 20페이지 텍스트에서 4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후보님의 여성 과학자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으면 합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사실은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은 남성, 여성 양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계에서는 항상 분량이 얼마나 하고 따집니다. 제가 총재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매년 했습니다. 대표연설을 하면 그 대표연설에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



응답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

“과학기술인 존중받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사라질 것” “임기내 노벨 과학상 수상자 나오길 기대”

다. 사실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또 교육, 다 양성을 대상으로 한 의미로 만들지만 특히 여성부분을 따로 떼어서 몇 줄이나, 몇 페이지나 언급했느냐 가지고서 민주당과 비교해서 한나라당은 약하다. 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써서 국회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숫자를 많이 넣어서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는 여성을 빼놓고서 우리는 절대로 발전을 이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

리가 5년 안에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할 때 그 일자의 상당부분, 아마 거의 반 정도가 여성이 차지해야만 인력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말 지식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에서 승진전형을 하면 가만 놔두면 위쪽 수위부터 몇 번까지 전부 여성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균형을 맞추느라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수한 여성인력은 앞으로 정말 필요하고 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출발이 너무 남성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주로 남성분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성 목표 할당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하면 헌법상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평등권이다 뭐다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못하고 권유하지만 국·공립이나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여성 연구원이나 또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목표 할당제를 해서 그 길을 터야 됩니다.

□ 김학수 (서강대 사회과학부 교수)

미 항공우주국 즉, NASA의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Up&Down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비를 조달하고 있는 일반국민의 관심과 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긴요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기본인프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이 일반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길만이 과학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인 몸의 문화로부터, 끊임없이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체육계통의 그런 것으로부터 전환해서 이제는 지적인 문화를 고양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국체전 개최와 같이 범국가적 지원체제로 전국과학축전 같은 것을 개최할 필요가 없는지요? 두번째로는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등이 쉽게 생활주변 도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군 단위에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과학관 같은 것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번째로는 매스미디어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국민이 쉽게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예컨대 공중파 공영방송 KBS나 MBC 같은 데서 과학프로그램을, 예컨대 약 10%나 20% 범위 내로 할당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내에 약 40여명의 전문인들을 두어서 과학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세가지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지금 말씀하신 그 세가지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의 국민을 지난번의 월드컵처럼 아주 열광하게 하고 모이게 하는 그런 것은 때때로 어떤 계기로 만들니다만 과학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지금 제시, 제안하신 부분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프로그램 관계는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할당을 하고 해도 그 부분은 또 약간의 시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청이 재미가 없으면 자연

히 프로그램을 사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재미있게 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토론문화가 별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시사토론 같은 거 안 봤습니다. 그래서 밤에 11시에 넣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사토론 같은 걸 아주 재미있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많이 보는 프로그램도 되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과학프로그램도 재미있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승덕 부회장)

이후보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 전부다 그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대선 때 보면 전부 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꼭 한번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책분야 중에 과학기술 정책분야의 우선 순위를 어느 정도 두시겠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제가 기자회견으로, 또 여러 차례 TV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의 21세기 성장엔진”입니다. 그것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혁신, 과학기술의 개발을 제1차적인 국가과제로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다른 데에서도 했습니다. 다른 자리에 표를 얻으려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ST)**